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 보험업계, 공보험 확대 논란에 대한 타협안 제시

-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업계는 정부가 전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경우 질병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평균적인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함.
 -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사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고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보험비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적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.
 - 그러나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건강보험 플랜에 대해 민간 보험사들과의 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민간부문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함.
 -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건강보험 산업 대표들은 의회가 모든 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안을 채택하기만 한다면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평균적인 보험료로 보험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함.
 - 이것은 보험가입 대상 집단이 커지면서 리스크와 비용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, 질병이외에 나이나 주거지역 등 다른 요인들은 여전히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.
- 이들은 보험료 결정방식과 함께 이윤이나 언더라이팅 과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규제를 통해 새로운 공적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.
 - 이와 관련하여 의회와 감독당국 관계자들은 보험사들의 태도가 전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협의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.
 - 지난 11월에도 건강보험업계는 모두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될 경우 질병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보험료 변동을 제한하고 강화된 규제를 허용할 것인지는 언급을 회피한 바 있음.

(New York Times 외, 3/25)